

기업활력법 개요

◇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을 심의·승인 ⇒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절차간소화, 규제특례, 세제 등 혜택 부여

※ 승인절차: 사전상담 → 사업재편계획 수립 → 신청 → 주무부처 사전검토(1개월) →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(1개월) → 주무부처 승인

* 기업활력법 연혁: '16.2월 제정 → '16.8월 시행 → '19.8월 일몰연장·개정(~'24.8월) → '19.11월 전면시행

○ (적용대상) ▲신산업 진출 기업

※ 국내 법인만 적용(개인사업자 제외), **부실(징후)기업은 제외**

○ (승인기준) ▲사업재편 요건: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행위

▲달성목표 제시: ① 수익성(매출액) 목표, ② 고용 및 투자 목표

▲(소극요건) 경영권 승계, 지배구조 강화, 계열사 부당지원

※ 구조변경: 합병, 분할, 회사설립, 자산(영업) 양수도 등
사업혁신: 생산·판매·제공 방식 효율화 등

【참고1. 적용대상 판단 기준】

※ (신산업 범위) 조특법상 신성장기술 활용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상 승인된 신제품·서비스 생산산업 ⇒ 신산업적 가치(시장성, 성장성, 파급효과 등) 평가 후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판단

신산업 범위(시행령 제3조의2)	
①	「조세특례제한법」시행령의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산업
②	「산업융합촉진법」의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산업
③	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정보통신융합기술·서비스 활용 산업
④	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의 지역혁신성장사업 통한 육성산업
⑤	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의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

【참고2.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혜택】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기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상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 ■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 ■ 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■ 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공정거래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주회사.자회사.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~2년) ■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 ■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
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법인세) - (양도차익)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-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(60%→100%)(‘20년 시행) [신규] ■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산업집적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(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) [신규]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의무화, 위반시 과징금 부과
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정책자금)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■ 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용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△0.2~△0.5%p, (기은) △1%p, (기보·신보) △0.2%p 등 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→축소가능) [신규]
고용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■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중소·중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, 해외마케팅사업(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, 수출금융) 참여 우대
연구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부 R&D사업 우대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